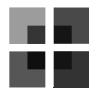




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19. 1.





목 차



I.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	4
III. 2019년 중점 추진과제	6
1.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·관리 확산	6
2.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	8
3.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	11
4.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	14
5.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	16
6.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한반도	18
IV.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	20

I.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평가

1

주요성과

□ (숲속의 대한민국) 국민이 참여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제시

- 새로운 산림정책 종합계획(master plan)으로서,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·관리 중심에서 '사람·공간'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
- 국토·산촌·도시의 3대 핵심 공간별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제시

□ (일자리) 산림분야 일자리 생태계 육성 및 산림일자리 저변 확대

- 산림일자리발전소('18.4 설립)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산림 분야 고유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규모 확대
 - * 5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등 252명이 참여하는 25개 지역공동체 발굴 · 육성
 - *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: ('16) 48개 → ('17) 72개 → ('18) 120개
- 청년층, 구직자에게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공감대 형성
 - * 청문청답(靑問廳答), 청년 창업캠프, 「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」 발간 등

□ (남북산림협력) 남북협력의 마중물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

-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('18.7, 10)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합의
 - * △산림병해충공동방제 △양묘장 현대화, △임농복합경영, △산불방지 공동대응 등
-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지조사('18.8),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약제 50톤 전달('18.11) 등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

□ (목재이용)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

- 미이용 산림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 상향($1.5 \rightarrow 2.0$)으로 경제성 확보
 - * 「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」 고시('18.1)에서 범위·절차 등 규정
-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 증진 및 목조건축 활성화
 - *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「목재이용법」 시행('18.5)
 - * 목조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」 (국토부) 개정('18.7)

□ (삶의질) 미세먼지 저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

- 미세먼지 저감·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기반 마련
 - *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, 바람길숲 등 신규 사업(402억원) 확보
- 취약지 도시재생과 연계한 '공동체정원' 조성으로 공동체의식 회복
 - *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4개소(남양주, 춘천, 청주, 고흥), 공동체 주민 120명 참여

□ (산림복지)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

- 휴양림 운영실태(환경, 시설, 프로그램, 서비스) 평가에 따른 등급제 실시
-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유아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
 - *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면적·운영인력 기준을 완화('18.8)

□ (산지관리) 산지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산지보전의 원칙 확립

-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('18.11)
 - * 발전시설 사용 후 산지로 복구하는 산지 일시 사용제도로 전환 /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(보전 5,820원/m², 준보전 4,480원/m²) / 평균경사도 기준 강화(25도→15도)

□ (산불) 산불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산불피해 최소화

- 유관기관 소통 활성화 및 진화헬기(2대) 확충 등으로 산불피해 저감
 - * ('18년) 496건 894㏊, '17년대비 건수 28.3%↓, 면적 39.6%↓
- 대형산불에 취약한 동해안 지역에 「동해안산불방지센터」 설립을 통해 중앙-지방, 산림-소방 산불재난 상시 협업대응체계 구축
 - * 강원도 동해안지역(6개 시·군) 산불 진화·대응 통합관리 수행

□ (AFoCO)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및 역량강화기반 구축

- 전략계획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국제기구로서 안정적 활동 개시
 - * 창립총회 개최('18.11, 13개국) 및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사업 매뉴얼 및 재무규정 등 마련
-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개소('18.7, 미얀마)

□ (산림사업체계) 대행·위탁의 세부절차 미흡으로 이해관계자 대립

- 산림사업 대행·위탁 규정이 수의계약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 지속 제기 및 이해관계자 대립(산림조합, 산림법인 등)
 - 대행·위탁 근거기준 및 절차를 명확화, 공정성 확보 요구

☞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대행·위탁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, 대행·위탁사업자 선정 등 세부 절차규정 마련 필요

□ (입법지연) 사람중심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추진

- 이해관계자 합의 난항으로 가칭 「도시숲 관리법」 제정 추진 지연
 - * 조경단체 및 전문가를 포함한 '추진협의회' 구성, 지속적 협의 실행(7회)
- 석재산업 전문화를 위한 「석재산업진흥법」 제정 지연(법사위 계류)
 - * 전문인력 양성, 석재사업자 등록·관리, 석재산업 지원,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·관리 등

☞ 공청회,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으로 조속한 법률제정 지원

□ (소나무재선충병) 일부 지자체의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 발생

- 신규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, 신규피해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생
 - * 신규(재)발생 : ('16) 19개 → ('17) 12개 → ('18) 4개
- 피해고사목은 감소하였으나, 일부 시·군·구는 피해가 증가하였음
 - * 진주 8,267본(180.4% 증), 고령 4,507본(92% 증) 등 29개 지역에서 피해 증가

☞ 지역별 방제 계획에 따른 철저한 방제와 이동단속으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, 예방을 강화하여 신규발생 차단

II.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

1

대내외 여건

- (일자리) 사람중심 산림순환경제를 통해 청·장년에게 전문일자리 제공
 - 청년의 구직수요는 증가하나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
 - *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은 9.5%, 체감실업률은 22.8%로 최고치
 - 베이비부머 세대(55~63년생)의 본격적인 은퇴로 장년층 구직수요 증가
- (균형발전) 국토의 44%를 차지하는 산촌을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활용
 - 인구감소, 청년층 유출 등으로 많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 상태
 - * 30년 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(39%)가 소멸위기(한국고용정보원, '18)
 - 정부차원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유도
- (삶의 질)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 거주 환경을 제공
 -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외출을 자제
 - *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82%, 미세먼지 나쁨시 외출자제 43%(한국갤럽, '17)
 - 좋은 먹거리, 쾌적한 주거공간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증가
 - * 숯세권, 세컨하우스 등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수요 증가
- (안전)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산불·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
 - 폭우, 가뭄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
 - * 산사태 발생추이(연평균) : ('80년대) 231 → ('90년대) 349 → ('00년대) 713ha
- (남북협력)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
 -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판문점 선언 이행 적극 추진
 - * 병해충방제약제, 양묘장 현대화 지원 등 분과회담 합의사항 단계적 이행

2

정책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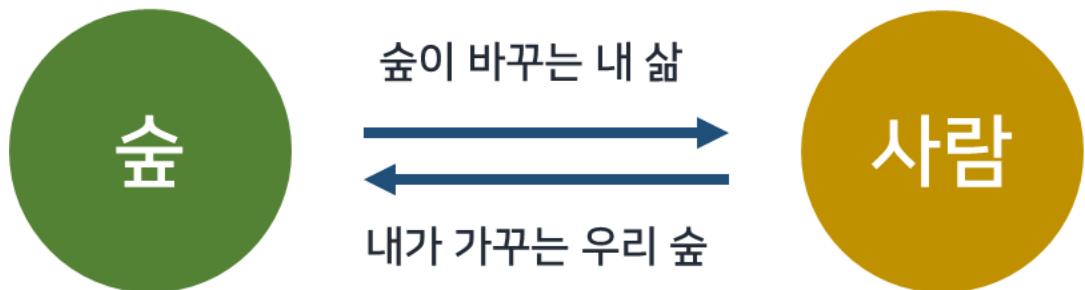
□ 숲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

- 잠재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형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
-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서비스를 확대하고,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산림 인프라 확충

□ 숲이 주는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내외 역할 강화

- 가리왕산, DMZ 등 훼손산림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
- 국제·남북산림협력 등 우리의 산림정책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

내 삶을 바꾸는 숲, 숲 속의 대한민국



숲이
바꾸는
내 삶

내가
가꾸는
우리 숲

1.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·관리 확산
2.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
3.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
4.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방지
5.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
6. 남북산림협력으로 이루는 숲속의 한반도

III. 2019년 중점 추진과제

1 사람중심의 산림 이용·관리 확산

가. 추진현황

- 사람중심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지관리체계 개선
 - (산지관리) 산지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 작성·고시
 - * 산지이용실태·산지구분타당성조사('15~'17)를 바탕으로 산지 관리체계 재정비
- 산림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기반 마련
 - (산림계획)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국-사유림 통합 산림계획 수립
 - 국유림관리소와 협업으로 시·군단위 중장기 산림계획 수립
 - * 인제, 양구, 강릉, 평창, 영월, 정선, 태백, 음성, 울진, 무주, 장흥
 - (산촌거점권역)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'18.4) 및 대상지 선정('18.7)
 - * 시범사업 대상 시군 : 평창, 인제, 울진, 괴산, 진안군

나. 추진계획

◇ 사람중심의 산림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,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활용하여 경제활력 증진

- 선택과 집중의 산지관리 원칙 강화
 - (산지정책) 산림관리의 근간이 되는 산지의 적정면적 유지 방안 모색
 - * 경제적·공익적 가치분석에 대한 계량학적 연구, 시민사회·학계 등 의견수렴
 - (보전)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시설 방지를 위한 산지 보전대책 마련
 -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을 금지하기 위한 「산지관리법」 개정 추진
 - 산업부·환경부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한 풍력발전 계획입지제 도입
 - (이용) 산지관리 원칙 내에서 산림자원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
 -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

□ 나무를 심고 가꾸어 산림의 경제적·공익적 기능 증진

- (경제림) 경제수 조림 및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
 - 임업인 소득 증진을 위한 특용자원 조림 및 경제림 숲가꾸기 집중
 - * 지역별 경제수종 : 북부(소나무·잣나무), 중부(낙엽송), 남부(편백·백합), 해안(삼나무·편백)
- (공익림) 공익용 국유림 확대 및 숲가꾸기를 통한 공익기능 증진
 - 생활환경·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정보호구역 우선 매수
 -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역할 강화

□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한 산림경영 확대

- (산림계획) 통합 산림계획 수립 지원(4시·군) 및 거버넌스 강화
 - * 국유림 비율, 산림산업 여건,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선정
- (선도산림경영단지) 신규지정(5개소) 및 주민주도형 경영체 발굴
 - * 신규단지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, 단지경영 담당자 전문교육(2회/년) 등
- (산림사업) 「산림기술법」 조기정착으로 품질 높은 산림사업 추진
 - 산림기술진흥계획, 산림사업 대가기준 수립 및 산림사업 품질 모니터링

□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살기 좋은 산촌

- (산촌거점권역) 시범사업 지정 5개 시·군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 - 중간지원조직, 지역거버넌스, 전문가 네트워크(산촌혁신포럼) 등을 활용하여 지역자산 중심의 참여적-체계적 전략 수립
- (제도개선)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
 - 「임업진흥법」 개정(현재 상임위 계류 중) 및 세부사항 준비

□ 산림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산림관광 기반 구축

- (제도화) 기본 통계 표준화, 인력양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
 - 통계 조사기준 마련 및 산림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
- (콘텐츠)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여행 상품 개발 및 스토리북 제작
 - 콘텐츠 공모사업 확대 및 국유림 명품숲 등 신규 명소·코스 발굴
 - * 공정여행사, 마을여행사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전문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

가. 추진현황

-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'그린인프라 구축방안' 마련
 -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숲사업 추진기반 구축
 - 산업단지 내외 차단숲 조성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반영(402억원)
- 증가하는 산림서비스 수요에 맞춰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 - 다양화되는 산림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여가공간을 지속적 확대
 - * 산림복지시설 현황(583개소) : 유아숲체험원(176), 산림교육센터(12), 자연휴양림(170), 산림욕장(199), 치유의숲(25), 산림치유원(1)
 - 휴양림 반려동물 동반입장(산음 등 4개소) 등 맞춤형 산림서비스 확대

나. 추진계획

◇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,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

- 도시숲 조성 등 생활녹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
 - (도시숲) 미세먼지, 도시열섬 완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숲 조성
 - 미세먼지 차단숲(32개소, 60ha), 도시 바람길숲(11개소 설계) 신규조성
 - (정원) 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을 산림관광 컨텐츠로 활용
 - 지역자원과 연계한 정원투어 프로그램인 정원가도(庭園街道) 구축
 - (공동체) 국민녹화운동, 마을정원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
 -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거주지역 주민 간에 소통공간으로 활용
 - * 마을정원 4개소(나주2, 무안, 곡성) 조성, 도시숲 클러스터 네트워크 강화
 - (법률)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조성·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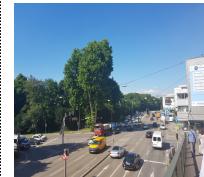
< 신규과제 :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>

▶ (차단숲) 미세먼지 취약지역 근처에 숲을 조성

- 산단·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
 - * 시화공단 완충녹지 : 미세먼지 12%, 초미세먼지 17% 저감효과
-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·유아시설에 도시숲 집중조성



<차단숲>



<바람길숲>

▶ (바람길숲) 도시 내·외를 잇는 바람길을 확보

- 허브(Hub)숲과 가로수를 연계, 도시숲과 외곽산림 연결
 - *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바람길 유도를 위해 Green-U Forest 조성

□ 산림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

- (통합예약)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
 - 자연휴양림마다 분산 운영 중인 예약시스템 및 회원 정보 통합운영
 - * 국·공·사립 자연휴양림(170개), 숲속야영장(96개) 등
- (바우처)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적용 범위 및 발급 매수를 확대
 - 이용권 발급 대상에 차상위계층,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
 - *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: ('18) 25,000명 → ('19) 35,000명
- (나무표지판) 쉬운 용어와 알고싶은 정보가 담긴 표지판으로 개선
 - 전국 산림복지시설과 수목원 내 식물표지판 교체(224개소 56천개)
 - * 식물명의 유래, 용도 등이 포함된 시설별 차별화된 식물표지판 개선

□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된 산림서비스 제공

- (산림레포츠) 산림 내 가능한 레포츠 종류 확대 및 올바른 이용 도모
 - 신규 산림레포츠 발굴·육성 및 등산객에 위협을 주는 레포츠 제재 규정 마련
- (국가숲길) 숲길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숲길 지정 근거 마련
 - 상징성,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 할 수 있도록 「산림휴양법」 개정(현재 상임위 계류 중) 추진
- (유아숲교육)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 모델 개발
 - 유치원·어린이집 연계형 유아숲체험원 확대 및 민간시설 조성 등록 지원

□ 산림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대

- (산림치유원) 지리산·덕유산권역 치유원(진안) 설계 및 주요 인허가 추진
 - 공사업찰방식 등 고려한 기본·설계 및 지역거버넌스 육성
- (수목원) 지역특성 및 국민 수요를 반영한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
 - 세종수목원(~'20) 4년차 공사, 새만금수목원(~'26) 기본설계 실시
- (무장애숲길) 목재데크를 활용한 Universal Design 숲길 조성 확대
 - 지역별 명산과 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주변으로 목재데크 숲길 조성
- (수목장림) 국·공립 수목장림 조성 및 사설수목장림 지원 강화
 - 국립 '기억의 숲' 조성(보령, ~'21) 및 공립(천안)·공공(산림조합 5개소) 조성지원
 - 소규모 산림형수목장림 모델 개발·보급 및 산림관리 기술지원 강화

□ 친환경 목재이용 활성화로 생활여건 개선

- (목재문화) 목재교육 활성화 및 I LOVE WOOD 캠페인 지속 추진
 -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및 친환경적인 목재이용 홍보
 - * 목재교육 관련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「목재이용법」 개정 추진
- (목조건축) 건축규제 개선 및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 조성 추진
 - 건축법, 주택법 등 목조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
 - * 안전성 확보 범위내에서 규모제한, 내화기준, 차음기준 등 규제 개선
 - 광명동굴과 연계한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 추진(높이 100m)
- (에너지자립마을)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시범마을 조성
 - 산림바이오매스 공급이 용이한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성계획 수립

<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>

[출생기]

숲태교



[유아기]

유아숲체험



[청소년기]

산림교육



[청·장년기]

산림휴양레포츠



[노년기]

산림치유



[회년기]

수목장



3

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

가. 추진현황

- 산림정책 기조를 “자원 중심 → 사람 중심”으로 전환하고,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정비,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등 이행기반 구축
 - (조직정비) ‘산림 일자리혁신본부’ 구성 및 ‘산림일자리창업팀’ 신설
 - (민·관 소통)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산림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신설
 - (종합대책) 산림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, 일자리 목표 제시
 - * 3대 분야 6개 유형의 일자리로 구분, 61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하여 실적 관리

<주요 추진경과>

'17.8.11	'17.9.1	'17.10.27	'17.11.15	'18.4.26	'18.5.15
산림일자리혁신본부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	산림일자리 위원회 구성	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산림일자리상황판 운용	일자리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	산림일자리 발전소 출범	산림일자리 혁신회의 운영

나. 추진 계획

- ◇ 산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림일자리발전소, 신규 자격제도 등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

□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활성화

- (목재)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업시설 지원을 통해 국산재 생산·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
 - * 목재산업단지 조성(1개소), CLT 생산설비(1개소), 시설현대화사업(25개소)
- (임산물) 표고버섯 등 주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 - * 표고 텁밥배지(국내산) 구입비용 지원, 통상실시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
- (석재) 「석재산업진흥법」을 제정(법사위 계류)하여 국내 석재공급 지원·관리 및 우수 사업자 육성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

□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생태계 구축

- (일자리발전소) 주민 역량을 높여 공동체 주도의 산림형 기업을 육성
 - 기 발굴된 25개 공동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, 잠재자원과 공동체 역량 등을 고려한 신규 사업지 선정 및 그루매니저 배치 확대

< 신규과제 : 산림일자리발전소 >

- ▶ (조직) 산림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
 - 임업진흥원 내 본부와 현장의 그루매니저로 구성
- ▶ (업무) 산림자원과 산림비즈니스 수요를 연결하여 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지원
 - 지역 자원 조사·컨설팅을 위한 그루매니저 배치
 - * ('18) 서울, 울주, 영주, 인제, 완주 → ('19) 35개 시군
 - 산림비즈니스 경영체 선발 및 집중 지원



- (사회적경제)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(예비사회적 기업 →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확장
 - * 신품종 재배단지('19, 2개소)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

□ 청장년층이 희망하는 산림일자리 발굴·확산

- (新직업)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규 분야 발굴 및 자격제도 도입
 -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영역의 전문일자리 창출

< 신규과제 : 산림분야 신규 자격 제도 >

- ▶ **나무의사**(국가자격) : 생활권 수목의 진료 및 처방 등 체계적 수목관리 전문가
 - * '19년 계획: 신규자격 배출('19.4, '19.10 자격시험) 및 수목진료업 조기 정착 지원
- ▶ **산림레포츠지도사**(국가자격) :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지도, 안전관리
 - * '19년 계획: 자격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(상반기)

- (정보제공) 국민 체감형 홍보와 수요자 맞춤형 산림일자리 정보제공
 - * 산림청장이 청년과 직접만나 일자리를 소개하는 '청문청답' 권역별 개최

□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및 사유림경영 지원

- (경영체등록) 임업경영체 등록제 신규 시행 및 임업지원체계 개선
 - 임야기반 경영체(5만건) 정보의 체계적 등록·관리 및 홍보 강화
 - * 경영체 조사·관리를 위한 등록조사원(64명) 채용 및 교육·관리(지방청)
 - 농업분야 직불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임업직불제 적용 검토
- (경영지원)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강화
 - 독립가 산림소유 요건 완화($10 \rightarrow 5\text{ha}$) 및 법인독립가 유형 신설
 - 응자 확대($340 \rightarrow 413\text{억 원}$) 및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 세재 개선

□ 농산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

- (산림재해일자리) 지역 중심 산림관리에 필요한 현장인력 고용
 - * 산불전문예방진화대, 산사태현장예방단,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13천명
- (신중년일자리) 퇴직자 등에게 소득창출과 사회공헌의 여건 마련
 - 도시녹지관리 등 산림서비스도우미(600명), 공공산림가꾸기(1,500명) 추진
- (고용지원) 안정적 민간일자리로 이동촉진을 위한 재취업 교육
 - *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→ 산림경영기술자자격증 취득 → 산림법인 취업

□ 산림복지서비스 일자리 양적·질적 향상

- (복지전문업) 등록기준 완화(자본금 요건 삭제 등) 및 민간 일자리 품질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유료시장 저변 확대
 - 전문업-수요자 매칭서비스,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시장 활성화 지원

< 부문별 산림일자리 >



(공공) 산불특수진화대



(민간) 산림복지전문업



(사회적경제) DIY 생활목공

가. 추진현황

- 「산림자원법」 개정('19.1)을 통해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 마련
 - (주요내용) 산림복원의 정의 명확화,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,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여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
 - * “산림복원” 이란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·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(回復)시키는 것
-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 최소화
 - (산불) 발생이 연중화·대형화 되는 가운데 전년도 산불피해 감소
 - * '18년 496건, 894ha로 전년 대비 건수(692건) 28%↓, 면적(1,480ha) 40%↓
 - 산불취약지역 대응 강화를 위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설치·운영('18.11)
 - * 산림청, 강원도, 동해안 6개 시·군, 기상청 등 협업조직
 - (산사태) 지진·땅밀림 등 신규 재난대응 및 예방사방을 추진
 -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및 땅밀림 기초조사 등을 추진
 - * 산사태 취약지역 : ('12) 390 → ('15) 18,981 → ('18) 25,594개소
 - (재선충병) 피해목 발생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발생지역은 확산
 - '18.4월까지 69만본을 전량 방제하였으나, 반출금지구역은 295만ha으로 확대

나. 추진계획

◇ 훼손된 산림의 복원 및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

- 체계적인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연결성 회복
 - (제도정착) 산림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·제도 정비
 - 「산림자원법」 하위법령 개정 및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
 - (복원사업) 가리왕산·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계 우선 복원 추진
 - GP 철수지 등 국방부 등과 MOU를 통해 DMZ 생태적 산림 복원

< 신규과제 : DMZ 내 GP철거지 산림복원 >

▶ (현황) 판문점선언으로 감시초소가 철거함에 따라 DMZ 내 철거지 조사·복원 필요

* 남측 100여개(GP60, OP40), 북측 182여개(GP160, OP20)



<복원 전>

▶ (계획) 복원을 통한 DMZ 고유의 산림생태계 보전

- GP철수지(파괴지) 10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복원(육군본부 및 유엔사 협의)

* 2개소 복원 설계·시공 436백만원



<복원 후>

□ 산림생물다양성 체계적 관리 및 산림생태계 보호

○ 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) 정맥·도서지역 중심으로 300천ha까지 확대

* 중장기 확대계획 : ('18) 152천 → ('22) 200천 → ('30) 300천ha

○ (산림보호)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추진

- 실태조사(인천·충남북 등 20개 산) 및 수거·처리(서울·경기 12개 산, 2천톤)

□ 산림재해 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

○ (상황대응) 산림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계 마련

- 산불발생 연중화 등에 대비하여 신속·정확한 상황관리 실시

* (기존) 산불상황실, 산사태상황실 등 개별관리 → (개선) 통합·종합관리(3교대)

○ (산불) 대형산불에 대비한 진화자원 확보 및 안전사고 관리 강화

- 헬기(초대형2대)와 특수진화대(330→660명)를 확충하고 정비인력 보강 추진

○ (산사태) 도로·전원주택 등 생활권 산사태 피해 예방·저감 추진

- '산사태재해영향성평가' 도입 및 공간단위(산림유역)의 사방 추진

*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인 0.5ha 미만과 산사태취약지역내 개발시 재해영향성 평가

○ (지진·땅밀림) 인명과 개발에 따른 땅밀림 피해 확산방지의 기반 마련

- 전국 땅밀림 실태조사('19~'23), DB 구축 및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

○ (병해충) 과학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

-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방제(~4월, 44만본 예상) 및 예방강화

가. 추진현황

- 아시아권역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
 - (AFoCO)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식 출범 및 기반 구축
 - 국제기구로서 공식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('18.11, 13개국 참가)
 -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개소('18.7, 미얀마)
 - (WFC) 산림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산림총회 개최('21) 확정
 - 개최시 약 160개국, 1만명 이상 방문이 예상되며, 금년도 아·태 산림회의(APFC·APFW) 개최를 통해 성공적 세계산림총회 기반 마련
- 산림복원·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마련 및 임산물 수출 확대
 - (산림복원) 창원이니셔티브 GD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인
 - Global LDN(토지황폐화중립) Forum 개최('18.7)로 LDN 이행 공감대 확인
 - (수출) 주요 임산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획기적 수출 증가
 - 감 : 집중 판촉 및 해외 콜드체인 지원으로 수출 확대(전년대비 50%증)
 - 대추 : 수출협의회 신규 결성 및 해외 블루오션 개척(전년대비 86%증)

나. 추진계획

◇ 한국주도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을 기여하고, 지속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국내 우수정책과 연계 및 인프라 확보

- AFoCO를 활용한 '그린 아시아 이니셔티브' 이행
 - (협력사업) 기구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회원국의 희망사업 지원
 - * 베트남, 캄보디아, 동티모르, 부탄 등 4개 국가의 산림복원 사업 지원
 - (가입확대) 서명국에 대한 비준서 기탁 독려 및 신규 회원국 유치
 - * 인니, 몽골, 라오스, 필리핀 등 비준 축구 및 중앙아 등 관심표명국 가입독려
 - (협상체결) 한국정부와 AFoCO간 본부협정(안)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추진
 - * 외교부,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 의결 추진

□ 아·태 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 성공 개최 및 세계산림총회 추진기반 마련

- (APFC·APFW) 내실있는 행사로 국제이슈에 대한 리더십 강화
 - '평화, 웰빙을 위한 산림'을 주제로 미세먼지, 산림휴양 등 주요의제 논의
 - * (기간·장소) '19.6.17~21, 인천 송도, (참석) 정부, 국제기구, NGO 등 46개국 1,500여명
- (WFC) '21년 총회 개최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체계 구축
 - APFC·APFW을 활용한 총회 홍보, 의제 발굴 및 FAO와 업무협약

□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

- (REDD+) 기후변화협상기반 감축결과물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 - 감축 결과물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현장활동 이행 및 모니터링
 - * 캄보디아, 미얀마 탄소배출권 발행 기반구축(~'21년)
- (사막화방지) 몽골, 중앙아 등 조림지의 사후관리 능력배양 지원
- (융합ODA) 농식품부, 해수부 등과 부처융합 ODA사업 발굴
 - * 베트남(맹그로브숲 조성-양식사업 융합), 캄보디아(정책연구기반 융합사업) 등

□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산림분야 협력과제 발굴

- (신남방) 생태관광·산림보전·교육 협력사업을 아세안과 연계 추진
 - 롬복 산림휴양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협력사업 발굴
 - AFoCO 교육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아세안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
- (신북방) 산림경관 복원 등 중앙아 관심사항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
 - 카자흐스탄(아랄해 경관복원) 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신규사업 발굴

□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강화 및 수출 확대

- (통상대응) 전략적 통상협상 대응으로 임산물 보호 및 수출여건 개선
 - RCEP, 페르코수르(남미) 등 폐가 FTA 협상에서 임산물 적극 보호
- (수출확대)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주요임산물 수출 지원 강화
 - * 감, 대추 등 수출반응이 좋은 임산물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등 집중 지원

가. 추진현황

□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('18.7.4, 판문점 평화의 집)

- (합의사항) 산림조성·보호를 위한 협력과제* 상호 협의 및 단계적 추진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, 산림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 발굴
 - * △양묘장 현대화, △임농복합경영, △산불방지 공동대응, △사방사업 등
- (현장조사)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금강산 지역 방문('18.8.8)
 - * (북측) 금강산 지구 피해현황 및 북한 내 주요 병해충 방제의 우선순위 설명

□ 평양 남북정상회담 시 산림협력 추진방안 논의('18.9.18~20)

- (공동선언) 평양 공동선언문에 “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”을 명시

□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('18.10.22,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)

- (합의사항)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 협력*, 양묘장 현대화 시범사업**, 산불·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협력 추진
 - *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를 제공, 다음해 3월까지 공동방제 진행
 - **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추진, 필요시기에 현장방문 진행
- (약제지원)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50톤 협력('18.11.29)
 - * 북측장비를 활용, 왕릉 주변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 공동방제

<주요 추진경과>

'18.4.27	'18.5.3	'18.7.4	'18.8.8	'18.9.19	'18.10.22	'18.11.29
제1차 정상회담 산림 TF구성	이행추진위 설립	제2차 산림분과회담 공동조사	산림병해충 공동조사	평양공동선언 · 2차 산림분과회담	제2차 산림분과회담 약제지원	소나무재선충병 약제지원

The grid contains five images illustrating the progress of forest cooperation:

- Image 1: Two men in suits shaking hands in front of a large map of the Korean Peninsula.
- Image 2: A group of people at a conference table, some shaking hands, during a meeting.
- Image 3: A group of people in a forest, examining trees and equipment.
- Image 4: Two men in suits shaking hands outdoors.
- Image 5: A group of people in a forest, possibly conducting fieldwork or inspection.

나. 추진계획

- ◇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당국간 신뢰를 구축하고,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

□ 남북간 산림협력 합의사항 이행 및 단계적 협력 확대

- (추가협의) 1, 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양묘장 현대화, 산림병해충방제 협력 등 당국간 협의 계속
- (병해충방제) 접경지역 소나무재선충병 △공동방제(~3월말) 실시, △피해현황 공유, △시료 교환·진단·분석 등 예방협력 추진
- (호혜적협력) 북측과 협의하여 △자연생태계의 보호·복원, △조림·산림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상호호혜적 협력모델을 구체화

□ 북한 산림복구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 철저

- (법적근거) 「산림기본법」 개정(심재권 의원안)을 통해 추진근거 마련
 - * 남북 간 산림보전·이용의 협력증진 및 이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책무 명시
- (묘목) 산림조성 협력의 단계적 추진에 대비, 종·묘 생산 확대
 - * 강원도 고성 '평화양묘장' 준공 및 묘목생산(연 최대 100만본) 개시
 - ** 북측 적합수종 중심 연간 5톤의 종자 채취·저장, 발아·양묘시험 병행
- (기술협력) 남북협력 민간교류 및 산림기술교육의 전초기지 구축
 - * 경기도 파주 '남북산림협력센터(스마트 양묘장 포함)' 설계·시공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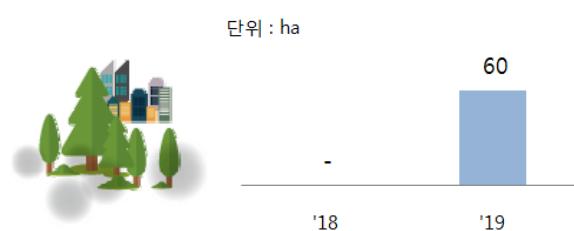
□ 다양한 주체의 참여 지원을 위한 창구기능 강화

- (민간교류) 민간·지자체 차원에서 협력·교류 추진 시 컨설팅 실시
 - * 유사·중복문제 해결, 효과성 검토, 기술지원, 매칭사업 발굴 등
- (캠페인) 국민공감대 향상을 위한 '숲 속의 한반도' 만들기 추진
 - * 탄소배출권 확보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등 호혜적 협력 공감대 향상
- (국제) UNCCD, FAO 등 북한 산림복구에 관심있는 국제기구의 참여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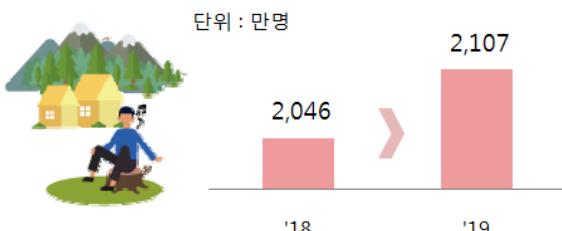
IV.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

▶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.

〈미세먼지 차단숲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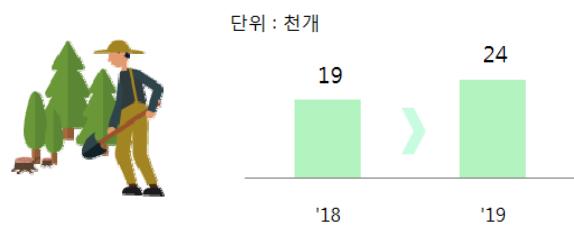


〈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수〉



▶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〈산림분야 일자리 수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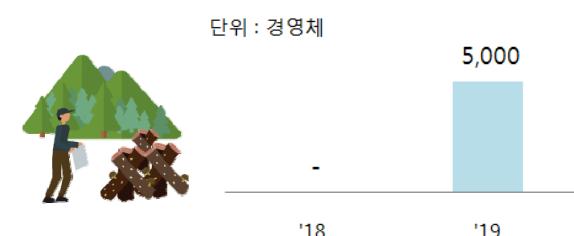


〈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규모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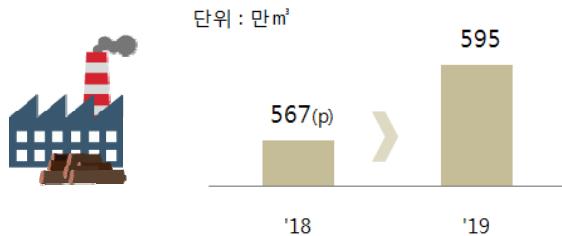


▶ 산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.

〈임업인 경영체 등록〉



〈국산목재 생산량〉



▶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.

〈산불·산사태 피해〉



〈산림분야 안전사고 재해자 수〉

